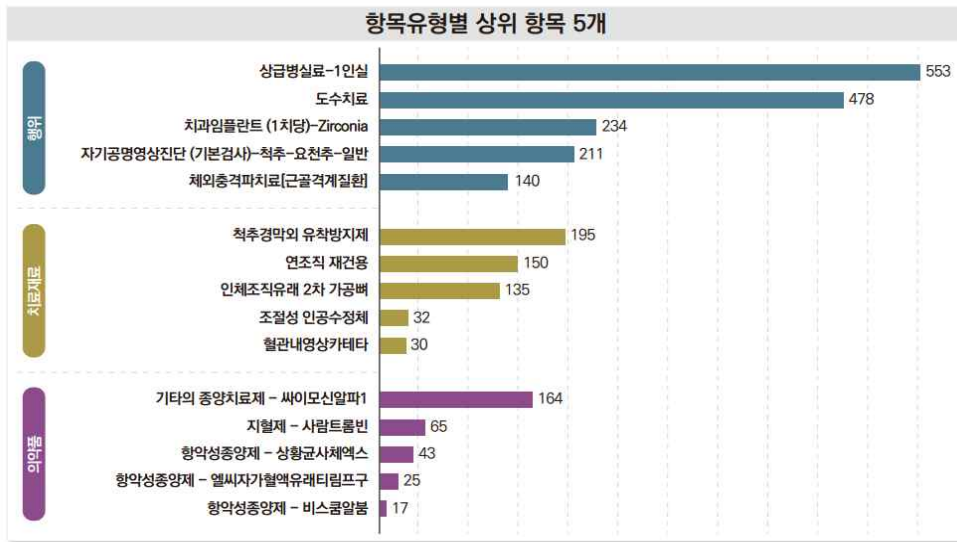


「비급여 ISSUE FOCUS」는 비급여와 관련된 기사의 주요 이슈를 파악·요약하고, 비급여 보고자료, 진료비 실태조사 등 다양한 비급여 자료를 활용한 분석 결과를 제시하는 자료입니다.

「2024년 하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주요결과

- ✓ (전체 비급여 진료비 규모) 병원급 의료기관의 '24년도 9월분 1,068개 항목의 진료비 규모는 총 5,760억 원으로, 상반기('24.3월) 대비 38억 원 증가함
- ✓ (의료기관 종별) 병원의 비급여 진료비가 2,559억 원으로 전체의 44.4%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고, 뒤이어 종합병원 1,203억 원(20.9%), 상급종합병원 686억 원(11.9%) 순임. 상반기 대비 한방병원(48억 원 증가), 요양병원(40억 원 증가)의 진료비 증가가 크게 나타남
- ✓ (기관당 평균) 기관당 평균 비급여는 1억 4,230만 원으로, 상급종합병원이 평균 14억 5,869만 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종합병원이 평균 3억 6,680만 원, 치과병원이 평균 2억 1,805만 원 순임
- ✓ (항목별) 상급병실료 1인실이 553억 원(9.6%)으로 진료비 규모가 가장 크고, 도수치료 478억 원(8.3%), 치과 임플란트(1치당)-지르코니아(Zirconia) 234억 원(4.1%) 순으로, 상위 10개 항목이 전체 비급여 진료비의 41.6%를 차지함



[그림] 항목 유형별 비급여 진료비 규모 상위 항목 5개

■ 비급여 보고제도 ■

비급여의 현황을 파악하고 국민의 알 권리와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는 제도('23.9월~)로, 상반기(3월분 진료내역)에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 하반기(9월분 진료내역)에 병원급 의료기관이 조사 대상임

* 비급여 보고항목: ('23.9월) 594개 → ('24) 1,068개 → ('25) 1,251개

2025년 3분기 비급여 주요 이슈

ISSUE 1 경실련, 미등재 의약품 제도 공백 속 비급여 가격 불균형 실태 발표

동일 성분 급여·비급여 약품 가격 차 최대 228배... 환자 비용 부담 가중시키는 미등재 의약품 관리 촉구

- ▶ 의약품은 급여 등재신청 의무가 없어 유사한 효과의 저렴한 급여제품이 있음에도 외용 지혈보조제, 국소마취제를 비급여로 사용하여 많게는 362.9배 가격 차이가 발생한다는 실태를 발표함
- ▶ 경실련, '비급여에 대한 실효적 관리체계 마련 필요.. 건강보험 급여 청구 시 모든 비급여 진료내역을 보고하도록 전환하여 불필요한 비급여 진료에서 국민 보호필요'하다는 등 관리대책 마련을 촉구함

ISSUE 2 비급여 성장호르몬 주사, 의학적 근거를 벗어난 오남용 사례 급증

국내 성장호르몬제 시장 규모는 지난 5년 새 약 4배 급증, '키크는 주사'로 알려져 성장 클리닉이 성행 중

- ▶ 비급여 약값은 연 1,000만 원 정도로 경제적 부담이 크고, 정상인에게는 불확실한 효과·호르몬 교란으로 인한 각종 합병증 우려에도 네 살 유아부터 평균 키 이상인 초·중고교생까지 다양한 연령군에 투약되고 있음

ISSUE 3 비대면진료, 비급여 약제 처방 오남용과 의약품 쇼핑 창구로 이용 우려

비대면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미용 목적 처방이 대다수라는 점이 지적되면서 우려의 목소리 불거져

- ▶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법안들 또한 잇따라 발의되었지만, 규제 수준과 허용 범위 제각각. 초·재진 여부, 대상 환자 범위 등에 대한 의견에 정부·의약사·플랫폼 간 이해충돌 양상이 여실한 상황임

ISSUE 4 새로운 실손보험 누수 주범으로 '지방무릎주사' 지목

신의료기술 '지방무릎주사' 반년 만에 실손 보험금 지급 91% 급증

- ▶ 최근 몇 년간 실손보험 누수를 야기한 '골수무릎주사'에 이어 '지방무릎주사'(24.6월 신의료기술 인정)가 급부상하여 실손 지급보험금 작년 하반기 2억 3,000만 원 → 올해 상반기 4억 4,000만 원으로 91.3% 급증함

ISSUE 5 질환, 난이도 등에 따라 가격 편차 큰 고가의 로봇수술 확산 추세

로봇수술 비중 매년 증가세, 최소 1,000만 원대 비용 부담 등 비급여 항목으로 병원마다 가격 편차 커

- ▶ 로봇수술이 점차 확산되는 추세에서 환자는 병원비, 보험사는 실손보험금의 지급 부담에 급여화를 바라지만 의료진은 병원의 수입과 직결돼 달갑지 않은 상황으로 이해관계자 간의 다른 입장 차가 존재하는 상황임

ISSUE 6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비급여 면역보조제(싸이모신알파1 등) 재평가 결과 공개

의료기술재평가 결과 '권고하지 않음', 면역보조제 일부 병원에서 오남용 문제 지속

- ▶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은 올 7월 암환자 대상 면역증강용 비급여 주사제 3종(싸이모신알파1, 비스콥알분, 이뮤노시아닌)에 대해 국내 임상 상황에서 통상 치료에 추가 투여하는 것을 '권고하지 않음'으로 결과를 발표하였고, 이에 대한 관련 제약사들의 잇따른 소송이 이어짐. 한편, 일부 병원의 오남용 문제가 지속되어 이슈가 되고 있음

이슈별 기사내용 및 분석

이슈가 되는 기사 내용을 요약하고, 관련 현황 파악 및 시사점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ISSUE 1

✓ 경실련, 미등재 의약품 제도 공백 속 비급여 가격 불균형 실태 발표

기사 요약 의약품은 급여 등재 의무가 없다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일부 병원에서 대체될 수 있는 급여항목이 있는 국소마취제, 지혈보조제를 비급여로 처방해 환자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는 비급여 의약품 가격 실태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 발표함

- ▶ 동일 성분과 효과의 급여 제품이 있음에도 환자에게 수백 배 비싼 비급여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함. 의약품으로 등재됐으나 치료재료 성격이 강한 외용 지혈보조제와 국소마취제가 그 사례로 많게는 362.9배의 가격 차이가 있다고 밝힘
- 등재신청 의무가 있는 행위나 치료재료와 달리 의약품은 신청이 의무가 아닌 점을 제약사가 이용하여 급여 등재를 회피하고 비급여로 사용한다는 의견
- ▶ 급여 등재 신청 후 제약사가 이를 취소하고 비급여로 사용하는 의약품도 있음
- 모 제약사의 지혈보조제는 급여 적용 시 8,324원, 급여 등재 취하 후 비급여 최저가 720원에서 최고가 100만 원으로 최고-최저 가격차는 약 99만 원
- ▶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미등재 비급여 의약품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정부의 비급여 관리대책 마련을 촉구함

관련 기사

- 비슷한 지혈보조제, 천원짜리 안쓰고 50만 원짜리 쓰는 병원들 (중앙일보,'25.7.22.)
- 보험 되면 1378원, 안 되면 50만 원... 같은 거즈인데 (동아일보,'25.7.23.)

시사점

미등재 의약품은 비급여 시장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전반적인 현황파악이 어려움. 의약품은 요양급여 결정 신청이 선택적이고 최초 승인·허가 사항에 대한 목록 공개 등이 되고 있지 않아 여러 쟁점사항들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함

✓ 비급여 성장호르몬 주사, 의학적 근거를 벗어난 오남용 사례 급증

기사 요약 키에 대한 비뚤어진 사회적 시선과 부모의 욕심으로 불명확한 효과, 각종 내분비 질환 합병증 발생 위험, 비싼 가격에도 성장호르몬 주사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음

- ▶ 초기 키 영양제로 시작된 열풍이 성장호르몬 주사로 이어져 성장호르몬 결핍증이나 터너증후군 등 희소병에 의한 저신장 환자에게 보험 처방되는 특수 약물이 ‘키 크는 주사’로 처방 및 투여되고 있음. 성장호르몬 투여자 중 97%가 비급여임
- 국내 성장호르몬 주사제 시장 규모는 지난 5년 새 약 4배 급증함. 비급여 약값은 매달 체중×2만원으로 연 1,000만 원 안팎임. 성장호르몬제의 65%가 수도권, 38%가 서울 강남 3구에서 처방
- ▶ 주사제 냉장 보관, 매일 부위를 바꿔 주사하는 어려움, 호르몬 교란으로 인한 당뇨·갑상선기능저하증·척추측만증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투여를 하는 상황임
- ▶ 최근에는 성조숙증 억제 주사를 동시에 처방하여 성장판이 닫히는 시기를 늦춘 상태에서 성장 호르몬 주사를 놓는 ‘하이브리드(Hybrid·혼합) 주사’ 또는 ‘칵테일 주사’도 유행중인 것으로 파악됨
- ▶ 미국에서는 정상 아동에게는 처방이 불가해 인천공항 근처엔 해외 교민이나 외국인 출입국 일정에 맞춰 검사와 성장호르몬 장기처방을 해주는 성장클리닉들도 성업중임

관련 기사

- “우리의 소원은 키”... 성장호르몬 주사를 예방 접종처럼 맞는 나라 (조선일보,'25.7.12.)
- “1cm라도 더, 키 크려고 맞았는데”... 성장호르몬 주사 함부로 놔다가 무시무시한 부작용이 (매일경제,'25.7.21.)
- 어린이 성장호르몬 주사에 대한 KBS ‘추적60분’의 엄중한 경고 (한익신문,'25.8.13.)

✓ 비대면진료, 비급여 약제 처방 오남용과 의약품 쇼핑 창구로 이용 우려

기사 요약 서울시 약사회, 비대면진료를 통한 탈모, 여드름, 비만 등 미용 목적 비급여 약제 처방 오남용과 의약품 쇼핑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함. 또한 의·약업계, 중개플랫폼 등 이해관계 집단의 의견 충돌로 비대면진료 법안에 대한 논의가 혼선을 빚고 있음

- ▶ 코로나 이후 시범사업 형태로만 허용되던 비대면진료가 일부에서 신분 확인 절차가 상대적으로 느슨하다는 점을 악용해 마약류나 탈모약, 비만약 등 미용 목적 의약품 처방이 대다수로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 ▶ 반면,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비대면진료 스타트업 업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492만 명의 국민이 비대면진료를 이용하였으며, 그중 40% 이상이 의료 취약계층이고 전체 진료의 99%가 의원급에서 경증·만성질환 중심이라는 결과를 발표함
- ▶ 22대 국회 발의된 비대면진료 관련 법안은 총 5건이고, 정부안은 의원급, 재진중심, 섬·벽지, 감염병환자, 거동불편자 등은 예외적으로 초진 허용 등의 내용이 담김
- ▶ 또한, 비대면진료 제도화 입법을 둘러싼 허용범위, 규제방식 등에 대한 정부, 직능단체, 플랫폼 업계 간 이해충돌 양상이 여실한 상황임

관련 기사

- 약국 "비대면진료 처방 발행 대다수 미용 목적 비급여약" (데일리팜,'25.7.15.)
- 정부, 국회에 "비급여약 비대면진료 악용 안전장치 필요" (데일리팜,'25.8.19.)
- "재진 중심VS전면 허용"...엇갈린 비대면진료 법안에 스타트업 긴장 (머니투데이,'25.9.21.)

✓ 새로운 실손보험 누수 주범으로 '지방무릎주사' 지목

기사 요약 지난해 6월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로 인정 받은 지방무릎주사, 실손보험금 지급 건수와 액수가 급증함. 기존 골수무릎주사의 입원 당위성 확보가 어려워 보험금 지급이 거절당하자 지방무릎주사로 우회하며, 일부는 동시에 전신 마취제인 프로포폴을 과잉 투약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음

◆ 최근 신의료기술 승인 관절염 치료법

1. 자가 골수 흡인 농축물 (BMAC) 치료법('23.7월 승인)
2. 지방 줄기세포 치료법으로 알려진 기질현관분획(SVF) 치료법('24.6월 승인)
3.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PRP)을 이용한 기술('24.12월 승인)

-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의원을 통해 입수한 '비급여 무릎주사 관련 실손보험 지급 현황'에 따르면, '지방무릎주사' 보험금은 신의료기술 인정 직후인 지난해 하반기 2억 3,000만 원 → 올해 상반기 4억 4,000만 원으로 91.3% 증가함. 이 기간 지급 건수는 114건 → 170건으로 49% 증가함
- 기존 병원별 1회당 가격이 100만 원에서 많게는 2,000만 원까지 천차만별이던 골수무릎주사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입원이 필요 없다'는 의학적 근거를 확보하면서 입원을 통한 시술에 보험사가 대체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상황 발생
- 실제로 골수무릎주사는 지난해 하반기엔 61억 2,000만 원에서 올해 상반기엔 25억 원으로 보험금 지급액이 감소하는 추세
- ▶ 지방무릎주사는 채취 시 전신마취에 준하는 수면마취를 시행하기 때문에 입원 당위성 확보에 유리하며, 입원 진료 시에 고가의 비급여 치료에 대한 실손 처리가 원활해 병원 입장에서 환자 유치가 용이함
- 일부 병원에서는 입원 당위성 확보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안전기준에서 벗어난 프로포폴 용량을 과다하게 투여하는 사례도 발생

관련 기사

- 지방 무릎주사, 입원 당위성 확보 유리... 프로포폴 과잉에 환자건강 우려 (아시아경제,'25.8.4.)
- 무릎주사 전액 실손? 新비급여 주의보 (아시아경제,'25.8.4.)
- "전액 실손보험 돼요" 지방 무릎주사 입원시키려 프로포폴 '잔뜩'...수백만 원 '날벼락' (아시아경제,'25.8.4.)

✔ **질환, 난이도 등에 따라 가격 편차 큰 고가의 로봇수술 확산 추세**

기사 요약 로봇수술은 집도 기술 발전, 빠른 회복·합병증 감소 등으로 환자·의료진의 선호도가 높지만, 최소 가격 1,000만 원대로 고가임.李大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치료 효과가 명확한 질환에 대한 로봇수술 급여 적용)과 더불어 일각에서는 급여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병원 수익 구조와 건보 재정 부담 등 이해관계가 복잡한 상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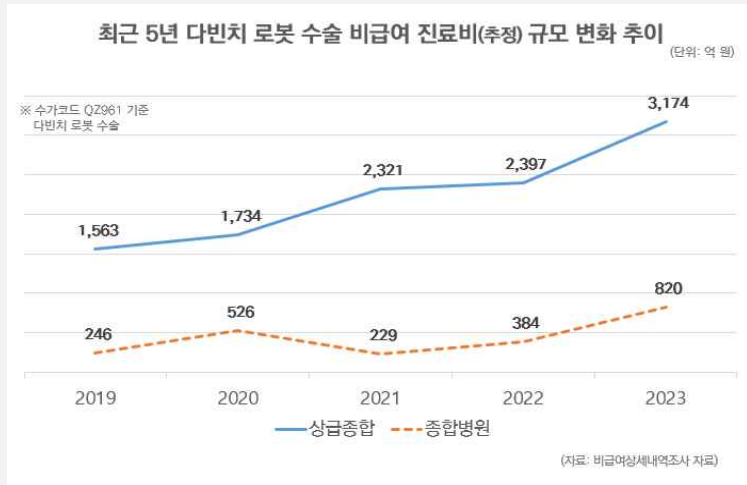
- ▶ 로봇수술 비용은 1,000만 원대에서 최대 2,500만 원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의료기관은 질환, 난이도, 수술 소요시간 등을 토대로 자율적으로 진료비용을 책정함
- ▶ 상급종합병원 관계자에 따르면 "질환별로 가격이 책정된다고 환자에게 안내하고 있으며, 통계적으로 해마다 로봇수술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고, 갑상선암, 유방암, 산부인과 등에서도 흥터가 적고 부작용도 적어 많이 쓰이고 있음
- ▶ 환자들은 고가의 시술 비용으로 인해 급여화 동의, 보험사 역시 실손보험금 지급 부담으로 인해 급여화 원하지만, 의료진은 로봇수술이 병원의 수익과 직결돼 급여화가 달갑지 않음. 정부는 건보 재정 등 여러 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임

관련 기사

- ‘1000만 원대’ 로봇수술 비중 커지는 상급종합병원…정부, 급여화 의지있지만 난제 산적 (디지털타임스, '25.9.18.)

✔ **팩트체크**

- ▶ 최근 5년('19~'23) 다빈치 로봇 수술의 비급여 진료비(추정) 규모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두 요양기관 중에서 모두 증가세를 보였으며, 특히 상급종합병원에서 더욱 진료비 규모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임



※ 비급여 상세내역 표본 자료로 추정된 진료비는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한국보건 의료연구원, 비급여 면역보조제(싸이모신알파1 등) 재평가 결과 공개

기사 요약 한국보건 의료연구원(NECA)은 지난 7월 암 환자 대상 면역항암제 비급여 주사제 3종*(싸이모신알파1, 비스쿰알분, 이뮤노시아닌 성분)에 대해 국내 임상 상황에서 통상 치료에 추가 투여하는 것을 ‘권고하지 않음’으로 재평가 결과를 공개하였고, 관련 제약사의 잇따른 소송이 이어진 한편 식약처는 싸이모신알파1 성분 일부 품목을 허가 갱신함

* 암환자 및 면역기능 저하자를 대상으로 종양치료, 항암 보조요법, 암 재발 예방, 면역기능 보조요법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비급여 주사제

- ▶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실이 복지부에서 제출받은 비급여 보고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한 달 비급여 의약품 지출 상위 항목에서 3종 면역보조제는 전체 진료비(364억 원) 중 52.8%(192억 원)을 차지함
-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병의원 청구건수는 '23년 상반기 9,121건 → 올해 상반기 1만 2,775건으로 2년만에 약 7% 증가했으며, 청구금액도 같은 기간 250억 원 → 283억 원으로 33억 원 증가
- ▶ 환자들은 해당 주사제의 암환자 또는 면역저하자 대상 추가적인 사용에 대해 ‘권고하지 않음’ 평가를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치료를 받는 경우가 대다수임
- 요양병원, 한방병원 등 일부 병원을 중심으로 면역보조제 과잉청구 사례가 늘어나 환자와 의료 현장의 혼선이 불거지고 있음

관련 기사

- ‘사용 미권고’ 암 면역주사, 도수치료도 제쳤다…“보험료 인상 우려” (중앙일보, '25.9.30.)
- “암환자 대상 비권고 약 남용…과잉청구로 보험 가입자 부담 키워” (아시아투데이, '25.9.30.)
- 암 면역보조제 무분별 처방…실손보험 과잉청구·사기까지 (약사공론, '25.9.30.)
- 면역보조제 과잉처방 333% 폭증(파이낸셜뉴스, '25.9.10.)

시사점

A상급종합병원 예방의학과 교수는 의약품의 시장 진입 후 관리 필요성을 언급하며, “임상 현장에서 축적되는 실제 효과성을 검토하고, 계속 사용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적 단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함

정책 동향

일자	상세내용
'24.2.1.	<p>복지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상체계 왜곡 유발하는 비급여·미용의료 관리체계 확립을 통한 공정 보상 유도 필요성 제기
'24.4.25.	<p>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효적인 비급여 관리를 위해 비중증 남용 우려 비급여 관리, 비급여 표준화 및 정보 공개 등 정보 비대칭 해소, 실손보험 개선방안 등 추진 발표
'24.6.19.	<p>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제3차 회의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수의료 투자 원칙을 수립하기 위해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을 포함하는 종합적 투자 전략을 마련한다는 원칙에 대해 의견을 수렴
'24.7.24.	<p>비급여·실손보험 소위원회(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산하) 첫 회의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말까지 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의 구체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하고, 소위원회 논의 결과는 전문위원회에 상정하여 금융당국이 운영 중인 보험개혁회의와도 연계할 것임을 발표
'24.8.13.	<p>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급여 명칭의 체계화·표준화, 비급여 진료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소비자가 비급여 진료를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 마련 ▶ 과잉 우려가 명백한 비급여에 대해 급여와 병행진료 제한, 표준가격 설정, 재평가 등을 통한 선별급여 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발표
'24.8.30.	<p>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 심의 및 의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급여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해 비급여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국민 의료비 관리체계 구축, 소비자 관심 비급여 정보 제공, 비급여 분류체계 정립 등 종합적 표준화 추진 ▶ 과잉 우려 명백 비급여에 대한 병행진료 제한 등 관리방안 마련, 주기적 의료기술 재평가를 거쳐 문제항목은 비급여 목록 퇴출 기전 마련
'25.1.9.	<p>의료개혁특별위원회,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비급여·실손보험 개혁 방안 정책토론회'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급여 관리 개선 방안의 검토 방향은 현행 비급여 중에서도 꼭 필요한 치료는 건강보험 급여화하고, 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에는 가치 '관리급여'로 편입하여 진료 기준 및 가격을 설정해 관리 ▶ 실손보험 개혁방안의 검토 방향은 실손보험으로 인한 의료 남용과 시장 교란을 방지하고 필수의료 기피 해소 등 의료체계 정상화에 기여하면서, 소수 가입자의 불필요한 비중증 비급여 이용을 차단하여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대폭 낮추고 중증 중심으로 보장 개편

일자	상세내용
'25.2.19.	<p>지난 1월 9일 개최된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토론회 등에서 제기된 '주요 쟁점 및 보완방안' 논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 도입되는 관리급여나 병행진료 급여 제한 등에 대해서는 국민과 의료 현장이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관리 대상 항목 등을 구체화할 필요성 제기 ▶ 실손보험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분 지원 비율 관련, 건강보험 본인부담율에 대한 정책적 결정이 왜곡되지 않도록 실손보험의 부담률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
'25.3.19.	<p>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심의 및 의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는 의료계-수요자 참여 논의 기구를 통해 선정 후 관리급여 적용 ▶ 사전 설명동의 등 별도 관리, 미용성형 목적 비급여와 불필요하게 병행되는 급여는 급여 제한 ▶ 실손보험의 ①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 보장 합리화, ② 의료체계 왜곡을 막기 위한 비급여 적정 보장(보험료 30~50% 인하 효과), ③ 심사 강화 및 투명성 제고 등 운영 합리화
'25.9.16.	<p>새정부 출범 이후 향후 5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할 국정 운영 로드맵인 「123대 국정과제」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급여 부담 완화를 위해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는 급여로 전환하여 적정 진료·가격 전환을 유도하고, 사전 환자 동의서 의무화, 의료적 필요성이 크고 비용효과성이 입증된 비급여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 추진

참고 기사 목록

구분	일자	언론사	기사 제목
비급여 약제	'25.7.22.	중앙일보	비슷한 지혈보조제, 천원짜리 안쓰고 50만 원짜리 쓰는 병원들
	'25.7.23.	동아일보	보험 되면 1378원, 안 되면 50만 원... 같은 거즈인데
성장호르몬	'25.7.12.	조선일보	"우리의 소원은 키"... 성장호르몬 주사를 예방 접종처럼 맞는 나라
	'25.7.21.	매일경제	"1cm라도 더, 키 크려고 맞았는데"... 성장호르몬 주사 함부로 놔다가 무시무시한 부작용이
	'25.8.13.	한익신문	어린이 성장호르몬 주사에 대한 KBS '추적60분'의 엄중한 경고
비대면진료	'25.8.14	데일리팝	'정부-의·약사-플랫폼, 비대면진료 법안 찬반 온도차'
	'25.8.19.	데일리팝	정부, 국회에 "비급여약 비대면진료 약용 안전장치 필요"
	'25.9.21.	머니투데이	"재진 중심VS전면 허용"...엇갈린 비대면진료 법안에 스타트업 긴장
지방 무릎주사	'25.8.4.	아시아경제	지방 무릎주사, 입원 당위성 확보 유라... 프로포폴 과잉에 환자건강 우려
	'25.8.4.	아시아경제	무릎주사 전액 실손? 新비급여 주의보
	'25.8.4.	아시아경제	"전액 실손보험 돼요" 지방 무릎주사 입원시키려 프로포폴 '잔뜩'...수백만 원 '날벼락'
로봇수술	'25.9.18.	디지털타임즈	'1000만 원대' 로봇수술 비중 커지는 상급종합병원...정부, 급여화 의지 있지만 난제 산적
면역보조제	'25.9.30.	중앙일보	사용 미권고' 암 면역주사, 도수치료도 제쳤다...“보험료 인상 우려”
	'25.9.30.	약사공론	암 면역보조제 무분별 처방...실손보험 과잉청구·사기까지
	'25.9.30.	아시아투데이	"암환자 대상 비권고 약 남용...과잉청구로 보험 가입자 부담 키워"
	'25.9.10.	파이낸셜뉴스	면역보조제 과잉처방 333% 폭증

※ 자료 이용 시 유의사항 안내

본 자료는 비급여 관련 동향 파악을 목적으로 발췌한 기사 요약 및 부서의 조사·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자료입니다. 본 자료의 내용을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원본 기사 및 보고서를 참고하시어 각 출처 기관을 명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